

김대중 교육감 “통합재정 지원 근거 특별법 명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교육행정통합보고회서 최고진 교육부 장관에 요청 교원 정원 보장 특례 건의도...“농산어촌 여건 고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이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재정 지원과 교원 정원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10편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광주·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도교육청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갖고, 통합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고진 교육부 장관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준비 경과를 공유하고 조직·인사·재정·정보시스템·자치법규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통합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

한 조직 구성 방향과 인사 운영 원칙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까지 추진할 후속 과제와 향후 일정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두 가지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차원에서 통합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유지를 위해 특별법에 교원 정원 보장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학생수 중심의 획일적인 정원 산정 방식만으로는 농산어촌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도교육감 겸 통합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 과제를 꼼꼼히



지난 5일 무안군 상항읍 전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에 참석한 최고진 교육부 장관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사진제공=전남교육청

점검하고 있다”며 “조직과 시스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말

했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국가균형발전과 교육

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교육청이 성

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통합특별시 출범 임박...행정서비스 공백 없앤다

전남도, 주요 통합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필수 조례 480건 사전 설명 등 의회 준비 본격화

전남도가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7차 주요 통합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최근 열고, 행정시스템 전환과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 전 완료해야 할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 실국장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생활 밀접 시설의 안내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모의훈련도 준비 중이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 통합과 행정 절차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과 민원, 세정,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통합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기간과 대체 수단을 시민들에

게 미리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에는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출범일 당일 심의·의결이 필요한 필수 조례 480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통합 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변화를 체감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1면 ‘장성 데이터센터’서 계속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지난해 11월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를 7호 프로젝트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PF 대출 약정 등을 거쳐 올해 2월 착공까지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업이 최근 전남의 AI·데이터센터 산업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전남이 AI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로 꼽힌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 고속 통신망을 갖춘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들어서면 클라우드, 인공지능, 첨단 제조, 연구개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이번 정부 지원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건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AI 관련 기업과 서비스 사업자 유치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전남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분산하고, 광주·전남권 AI 산업 생태계와 연결할 경우 지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 AI 정부 대전환 책임자

국내 IT 산업 성장기 이끈 대표 경영인 평가

7일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T와 정부를 두루 경험해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 대전환의 책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자의 발탁이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AI와 디지털 산업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영 경험과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성과, AI 정책 비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1967년 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 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엠퍼스 검색사업본부장과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6년간 회사를 이끌며 국내 IT산업 성장기를 이끈 대표 경영인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며 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쳤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된다. 여성 총리로는 2007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이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

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총리실은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준비단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검증 사항에 대응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심사 절차는 2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경력, 이해충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준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선관위 “투표용지 모자라 더 보낸 투표소 67곳”

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지 사태’에 사의 표명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채울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7개 투표소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50개

투표소에서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됐다.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재개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집계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허혈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길

벨기에·이탈리아 정상회담·교황청 방문 등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어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2~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미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회담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오는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다. 아울러 16~17일에는 프랑

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나서기 직전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 시간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힐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광주시당 “선관위·KBS 지역 비하 사죄를”

개표참관인 홍보영상에 ‘홍어’ 그래픽 논란...문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의 개표참관인 안내 홍보영상에 일베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상징하는 ‘홍어’ 모양의 그래픽이 노출된 것에 대해 즉각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영방송 KBS의 공식 홍보 영상에 지역을 비하하는 상징물이 삽입돼 전국에 송출된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AI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지시어를 입력해 혐오 이미지를 생성한 것은 단순 실수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며 “악의적인 지역 조롱 관행이 헌법기관과 공영방송의 내부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당은 “지역을 비하하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생산해 전국으로 송출한 선관위와 KBS는 광주시민, 나아가 호남 지역민, 나아가 국민 앞에 즉각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는 변명을 멈추고 어떠한 인공지능 지시어가 입력돼 이 같은 혐오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홍보물에 지역 비하 의도가 담긴 이미지를 삽입한 실무자는 물론 이를 방치하고 용인한 책임자들에게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호한 문책을 통해 헌법기관과 공영방송 내부의 무너진 공적 윤리를 엄정하게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 퇴출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찍기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다시는 공적 영역에 어떠한 차별과 혐오도 발 불일 수 없도록 확고하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개표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에는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여온 ‘홍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캐리커처들이 한숨을 쉬는 장면과 함께 ‘홍어’로 보이는 반투명형의 형상이 빠져나가는 듯한 연출이 담겼다. 영상은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과 KBS 지방선거 개표방송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은 KBS 자회사인 KBS N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gback@gwangnam.co.kr